지역 정책 : 어떻게 해야하나 ?

2012. 9.

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
위원장 홍 철

목 차

Ⅰ 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Ⅱ 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Ⅲ 지방보통시민의 幸福한 삶, 어떻게 ?

Ⅳ 4대강,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?

Ⅴ 지역정책, 누가 主人인가 ?

Ⅵ 지방재정, 무엇이 問題인가 ?

Ⅶ 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 ?

Ⅷ 지역발전, Control Tower가 있는가 ?

I 대한민국, 健康한가 ?

자랑스런 대한민국 ! 위대한 한국인 !

- 산업화 성공 : 88서울올림픽 개최
- 민 주 화 : 민주적 정 권 교 체

세계 7번째로 20-50 club 가입

반세기만에 이룩한 大한국인의 쾌거

※ 선진국 : 100~200년 소요

누가 主役을 했나 ?

- 1만불 소득 (1995년)
  - 강력한 리더십(故박정희대통령) + 공무원사회
- 2만불 소득 (2010년)
  -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

※ 정치권력과 경제권력(재벌) : 분리

지역적 : 수도권이 主役 ➡ 한강의 기적

30-50 클럽 진입을 위한 요건

- 6개 선진국 : 5~14년만에 진입성공

  *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일본

- 필요조건 : 지속적 성장
- 충분조건 : 개발년대 사고 완전불식

개방성, 창의성, 다양성

국가사회 전반 : 혁신요망

대한민국의 당면과제 : 3대 양극화 해소

(1) 빈-부격차 ➡ 분배 (복지)

(2) 대기업-중소기업 격차 ➡ 경제민주화

(3) 수도권-지방 격차 ➡ 지방분권 (지방살리기)

※ 수도권 분산정책 : 한계

한국의 지역 : 무엇이 문제인가 ?

(1) OECD 최고의 수도권 집중국가 ➡ 수도권권력

* 인구 50%, 주택건설 65%, 예금은행 대출액 70%

(2) 대표적인 중앙집권국가 ➡ 중앙권력

수도권권력 중앙권력

※ 지방 : 안보인다

Ⅱ 수도권 집중, 解消되고 있는가 ?

개발년대의 지역정책 (60년대~80년대)

- **국가발전정책 ➡ 지역발전**
  - 산업단지, 각종 SOC 건설
  - ※ 지역정책 개념 : **不在**

- **수도권 집중 시작**
  - 수도권 정비계획법('82) : 수도권 규제

민주화 · 세계화 시대의 지역정책 (1990년대 이후)

- **민주화**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
  - 지방의 개발욕구 증대
    ※ 중앙과 지방, 지방간 : 갈등 증폭
- **세계화** 신산업(IT, BT, NT 등) 경쟁
  - 신산업 : 수도권이 최적지

  ※ 수도권 집중심화

진정한 지역발전정책 : 필요성 제기

참여정부의 지역정책 : 균형발전

- **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**

  - 세종시, 혁신도시(전국10개) 건설

- **지역전략산업육성**: 시도별 4개씩

  - 전국에 100여개의 각종 R&D센터 설립
  - 신산업의 지방분산 차원

프랑스 : 지역정책 대전환

- '60년대 이후 수도권(파리)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
  - ➡ 파리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동시 저하
- 2000년대 : 지방분권 및 대도시권 육성정책
  - 헌법개정('03년) : '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다'
    - · 국가-지자체 권한 재배분 추진
  - 대도시 중심의 메트로폴 신설
    - · 그랑파리(Grand Paris) 및 11개 대도시 육성

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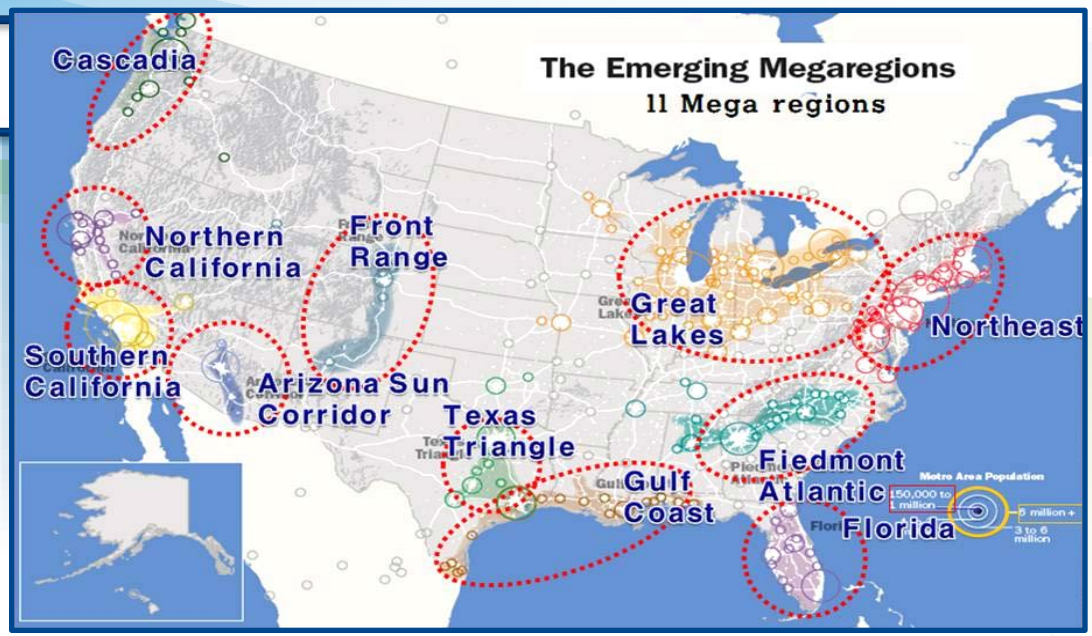
- 5+2 광역경제권 : 세계적 추세
  - 장기간 소요
- 선도산업 지원 : 지방 신산업 육성
  - 내일의 일자리 창출
-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: 고속도로, KTX 등

광역경제권 : 시작단계

➡ 지속적 정책추진이 요망

미국

- 국가 성장엔진으로 11개 광역경제권 (Mega Region) 구상
  ※ 고속철도로 연결



동북아

- 중국 3개 광역경제권 추진
- 일본 8개 광역지방계획권 → 1개 초광역경제권으로 전환 도모
  ※ 신간센 : 581 km/h로 상향추진

수도권집중 : 심화·확산되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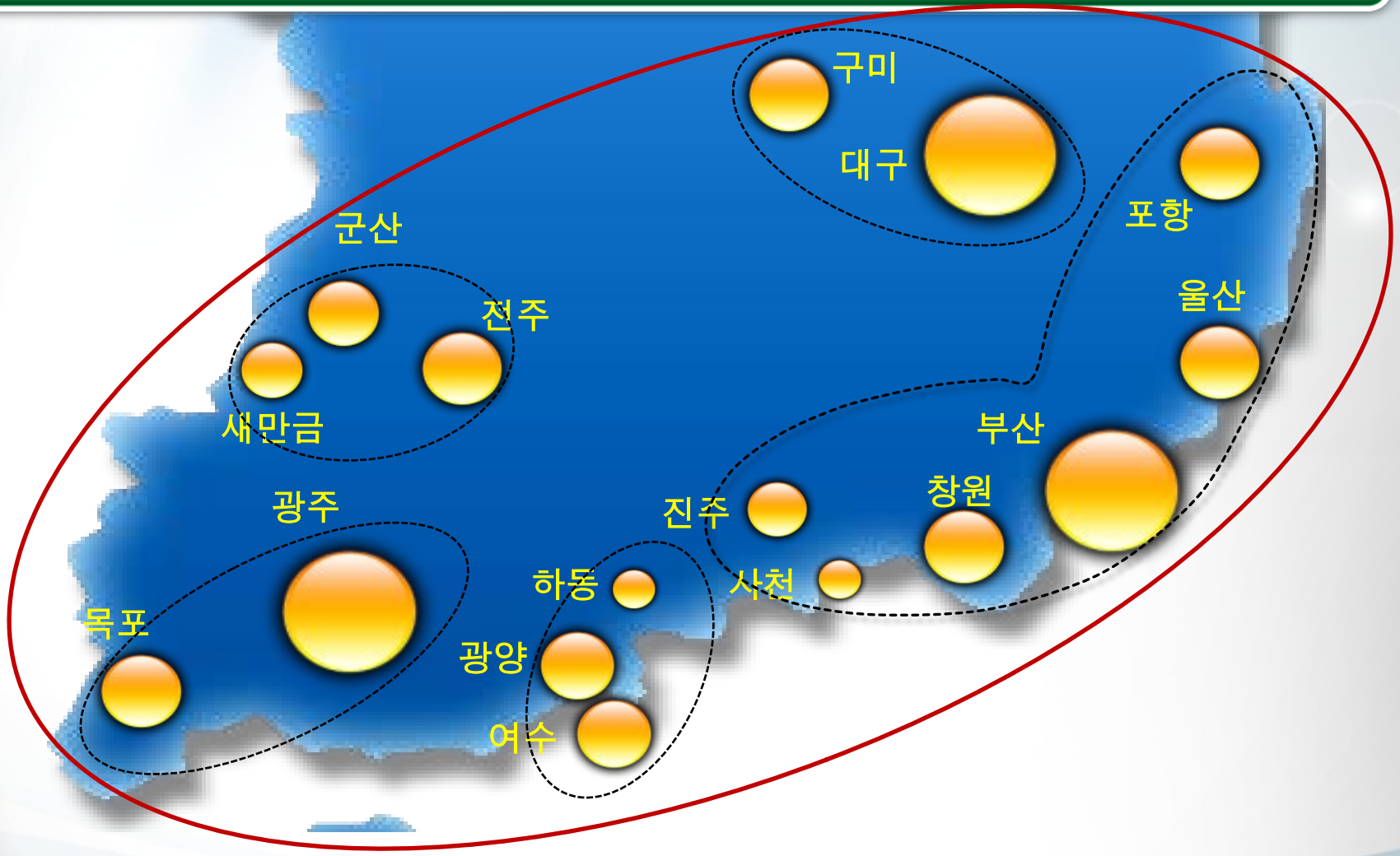
- 신산업 수도권 집중 ➡ 수도권 집중심화
  * 연구개발인력: 60.3%('02) → 63.3%('10)
  * 서비스업 종사자: 49.0%('00) → 53.6%('09)
- 수도권 확산 : 충청권, 강원도
  - 충청권 : 세종시, 국제과학벨트
  - 강원도 :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(각종 SOC건설)

수도권 ➡ 중부경제권으로 확산

중부경제권 : 10년내 구축 가능

세종시, 2018 평창동계올림픽 : 촉매제

남부경제권 : 소경제권 구축이 우선과제



3+1 광역경제권 ➡ 한반도 경제권

통일 대한민국 :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

Ⅲ 지방보통시민의 幸福한 삶, 어떻게 ?

지방보통시민의 삶

- **개발년대 : 행복했다**
  - 일자리가 있었다
- **민주화시대 : 행복했다**
  - 자유와 권리신장 : 대통령 직접선거
- **2000년대 : 행복한가 ?**

2000년대 : 주요 지역사업들

- 신산업 : 전략산업, 선도산업, R&D센터
- 여수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유치
- 대형 문화·체육시설, KTX 건설

SOC, Hardware 위주

지역주민의 ‘삶의 질’ 개선과 거리가 멀다

지방보통시민의 소망 : 소박하다

- 어느 정도의 **품격을 갖춘 일자리**
  - 3D아니면 중소기업도 좋다

  ※ 청년실업 : 신산업을 원한다
- 고액과외 안하고도 **자녀 대학진학** 가능
- **살기 좋은 도시환경**
  - 노후불량주택 개량, 버스타기 편하게
  - 안전한 밤거리, 응급시 종합병원 진료

지역정책방향 : 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촛점

오늘의 일자리 창출 : 최우선 과제

- 지역 신산업 육성 : 내일을 위한 일자리
- 대기업, 외국기업 유치 : 조건이 맞아야함
  - 땅값, 기술인력, 주거환경 등
- **지역 주력 (및 특화) 산업 : 고부가가치화**
  - 현장 R&D, 기능인력 공급

지방중소기업청, 지방고용노동청, 지자체, TP 등

통합적 운영 : 지방중소기업육성에 총력

지역 신산업 육성 : 중앙정부 주도

- 국가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

  ※ 지자체 : 力量(전문인력, 재원) 不足

- 난립한 각종 R&D 특화센터 : 정리

  - 많은 기관이 운영난에 직면
  - 지역대학과 연계방안 강구

- 선도산업지원단 : 국가산업정책에 흡수통합

지방교육 육성 : 지역발전의 초석

- 지방 명문고교 육성 : 유명대학 진학가능
  - 기숙형 고교 운영, 유명학원 강사 초청(예: 거창고)
- 지방대학 육성 : 특성화 유도
  - 지역 주력 산업과 대학간 연계 강화
- 전문대, 마이스터고 육성
  - 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

  ※ 인재의 지역정착 유도

지역정책의 포커스 : 도시경쟁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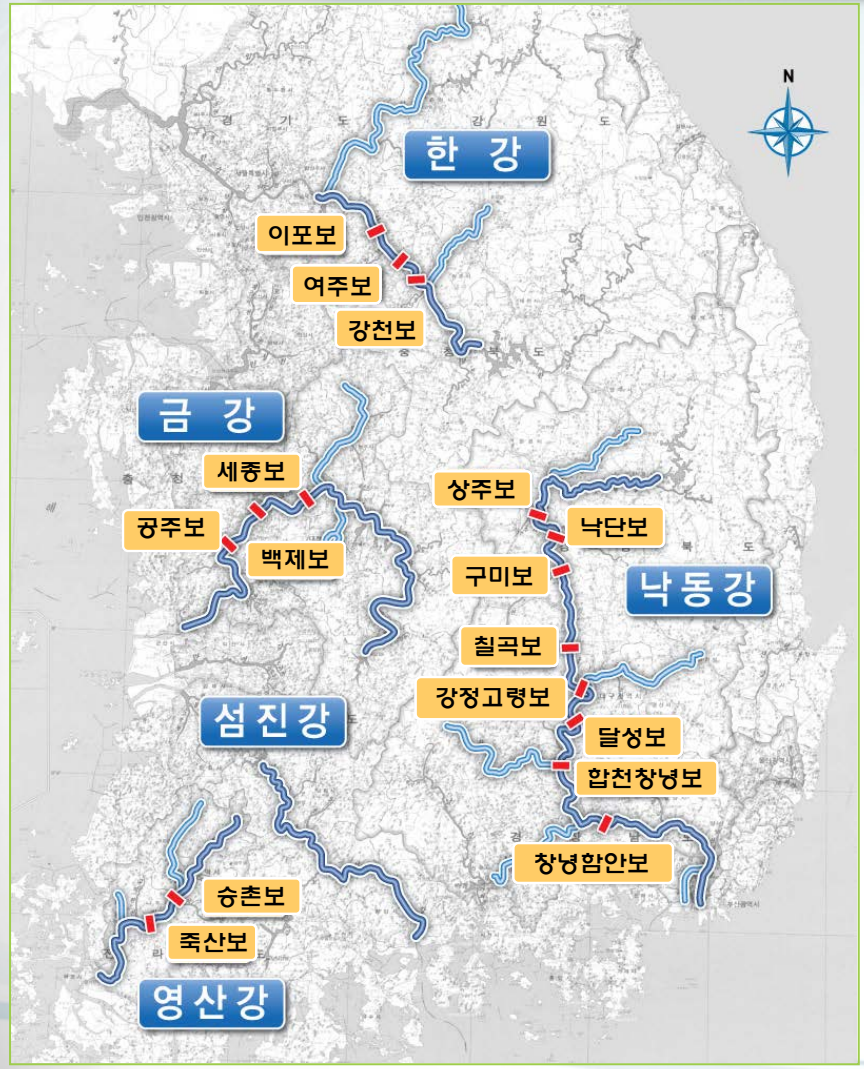
- 지방대도시(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) : 중심도시기능 약화
  - 인근도시 → 서울과 직접교류
- 지방중소도시(읍 포함) : 도시기능 상실
- 국민의 90%이상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
- 도시는 삶을 담는 그릇 ➡ 통합적 운영 요망
  - 산업, 교육, SOC, 환경, 문화 등이 **別個**로 운영

도시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

인근도시와 연계협력 : 도시권 육성

Ⅳ 4대강,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?

물 문제 해결과 강 중심 국토 재창조



- 200년 빈도 홍수 방어
  - 퇴적토 준설, 댐/홍수조절지 등
- 11.7억톤 수자원 확보
  - 다기능 보 / 댐, 저수지 증고 등
- 수질개선과 생태복원
  - 1,281개 개선사업, 습지조성
- 안전한 농업환경조성
  - 농경지 리모델링, 용수확보

지역의 삶과 문화를 위한 공간 창출

- 문화·관광산업을 위한 랜드마크 : 16개보와 36경
- 234개 생태공원(130㎢)과 친수공간 확보
- 1,757㎞ 명품 자전거길 : 국토종주 인증 31,218명
-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작년 10월 개방이후 937만명 방문

달라진 낙동강의 모습 (화명지구 수변공원)

4대강, 이제는 지역을 위해 활용하자

- 지류지천 정비, 안전한 유지관리 등 관심 필요
- 하천 친수공간은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
- 보 붕괴, 녹조 등 4대강 괴담확산은 자제 필요

지자체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활용방안 강구
중앙은 지자체 전략에 대해 적극 뒷받침 해야

V 지역정책, 누가 主人인가 ?

지금까지의 지역정책 : 누가 主導 ?

- 중앙정부 : 기획, 감독, **主演**
  - 중앙공무원 : 지역인식에 한계
- 지자체 : **助演**
  - 집행기능, 예산 따오기
- 정치인 : 예산따오기의 실질적 **主役**
  - 인기위주 : 대형사업, 전시성사업

主客이 전도된 지역정책

(권한 : 중앙정부, 책임 : 지자체)

앞으로의 지역정책 : 지자체 主人

- 지역을 가장 잘 알고, 지역에 애정이 있는
  ➡ 사람(또는 기관)이 주도
- 기초 지자체(**市 · 郡**)가 중심
  - **區**는 광역시가 통합적 관리
  - 예산배정은 가급적 **市 · 郡** 단위로 배정

- 광역**道** : 생활권도 경제권도 아님 ➡ 기능개편
  - (예) 중앙부처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을 **道**로 이관

※ 지방교육청과 기능적 통합

지자체(市·郡) 주도의 지역발전 : 가능할까 ?

- 지자체 입장 : 지방은 돈이 없다
  - 공무원 봉급, 복지 비용, 각종 사업의 매칭펀드
  - 단체장 : 선거공약 이행
- 중앙정부 입장 : 지방은 **力量**(사람)이 없다
  - 돈 주면 잘 할 수 있는가?
  - 호화청사, 경전철 등 예산낭비

지방분권(재정분권), 지방역량 강화

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

지방분권 : 돈, 권한 ➡ 지자체(市·郡)

- 중앙공무원 : 생존의 문제
- 정 치 인 : 각종 국책사업 따오기 용이
- 지 자 체 장 : 잘못하면 괘씸죄
- 지방공무원 : 권한 줘도 골치 아프다
- 시 민 단 체 : 메아리 없는 외침

국회가 초당적 협력

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여야 !

,

지방재정 세출현황

- **경상경비 등 : 20%**
- **지자체 자체사업 : 40%**
- **국고보조사업(984개) 지출 : 40%(48조원)**
  - 각종 복지사업, 부처별 지역사업
  - 국고보조(30조원) + 지방비 매칭(18조원)

※ **지방교부세(27조원) 66%가 매칭펀드로 지출**

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: 지자체예산 블랙홀

국고보조사업 목록(예시)
광특회계 지역계정 부처별(국토부, 농림부, 행안부)

포괄사업명 (주관부처)	실제 운용사례
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 ▪살고싶은 도시만들기(16개 사업)
일반농산어촌 개발 (농식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특수상황지역 개발 (행안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소도읍육성 ▪지표수보강개발 ▪살기좋은지역만들기 ▪어촌종합개발 ▪신활력지원 ▪ 농촌마을종합개발 ▪ 전원마을조성 ▪농촌생활환경정비 ▪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▪소규모용수개발 ▪주거환경개선 ▪개촉지구지원 ▪산촌생태마을조성(15개)
성장촉진지역 개발 (국토부)	▪도서종합개발 ▪개촉지구 지원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부문(Ⅰ)

- **주민의 '삶의 질' 개선에 우선**
  - 외형위주의 대규모 행사(또는 사업)지양
  - 쾌적·안전·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에 주력
  - 기존시설(문화,체육 등)의 활용도 제고

- **지역역량 강화사업**
  - 지역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
  -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육성

지방재정개편 : 세출분문 (Ⅱ)

-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(984개) : 축소

  ➡ 확보된 재원은 교부세율 인상에 활용

  - 복지 등 전국 공통사업 : 차등보조
  - 비공통사업 : 단계적 지방이관+교부세율 인상
  - 신규 국고보조 사업 : 최대한 억제

국고보조사업 : 축소 정비는 재정분권의 출발점

지방재정개편 : 세입부문

부동산 세수감소 및 복지비용증대 : 지방재정 보전필요

대안 Ⅰ 지방소비세율 인상(현행:부가가치세의 5%)

○ 수도권 편중 : 상생발전기금 ➡ 지역간 양극화 완화 한계

대안 Ⅱ 지방교부세율 인상

○ 낙후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배분 유리

대안 Ⅱ : 현실적 대안임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(Ⅰ)

- **광특회계 현황**
  ① 지역계정 (각종 지역개발사업)
  ② 광역계정 (R&D, 인재양성사업)
  ③ 제주계정

- **지역계정 : 주민 삶의 질 관련 사업으로 전면개편**
  - 농어촌 마을만들기, 도심재생 사업 등으로 통폐합
  - 포괄보조금 개선 : 시도별 배분 → 시군구별 배분
    市·郡에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

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 개편 (Ⅱ)

- 광역계정 : 지역간 연계협력 , 특화산업지원 위주로 재편
  - 국가 R&D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
  - 다양한 분야의 연계사업 발굴 추진
  - 중소기업 육성, 고용지원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

명칭개정 : 지역균형 및 지역활력증진 특별회계(가칭)

지방재정개편 종합

세 출

- 주민 삶의 질 개선
- 지방역량 강화 초점 : 인력개발, 특화사업지원
- 국고보조사업(984개) 축소

세 입

- 지방재정 보전 : 지방교부세율 인상

Ⅶ 귀촌·귀농 活性化, 어떻게 해야하나?

귀촌·귀농 현상 : Trend化

- 산업화 시대 : 이농현상 (농촌 ➡ 도시)
- 세계화 시대 : 귀촌현상 (도시 ➡ 농촌)
- 은 퇴 자 : 베이비부머 세대 (720만명)
- 자연주의자 : 도시가 싫다(3040세대)

귀촌확산 : ('01) 880세대 → ('11) 1만 세대

"이들은 돈도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"

농촌(초고령사회)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

귀촌·귀농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

- 정부는 큰 돈들일 필요가 없다
  - 각종 정보제공, 현지적응 교육실시
  - 적응기간(1년정도) : 임시 숙소제공
- 귀농인 : 과학적 신농법 확산
  -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확충 :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
- 농산어촌의 창조적 지도자를 육성
  - 지역공동체(CB), 협동조합 : 풀뿌리공동체 육성

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기여

Ⅷ 지역발전, Control Tower가 있는가 ?

- **중앙정부**
  - 지방분권 : Road Map작성
  -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SOC : 적기공급
  - 인근 지자체간 연계협력 : 유도
- **지자체(광역시, 市·郡)**
  - 지역특화발전 전략수립·추진
  - 민관 파트너십 구축

지역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

- 현 행 :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
  ※ 지역발전위원회 :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
- 문제점 : 부처간 **사업중복**, 지자체간 **갈등**

지경부(산업), 행안부(재정세제), 기재부(지역예산)

➡ 통합 : **총괄조정기관** 신설요망

* [대안 1] : 기획재정부 전담부서 신설
* [대안 2] :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로 전환

지역발전정책과 재정의 연계 강화

감사합니다

/대/통/령/직/속/
지역발전위원회